

# KB 지식 비타민

120세 시대, 장수혁명이 가져올 미래

- 기대수명의 획기적 연장, '장수혁명'의 대두
- 장수혁명으로 인한 사회 변화
- 장수 리스크를 넘어 장수혁명으로

<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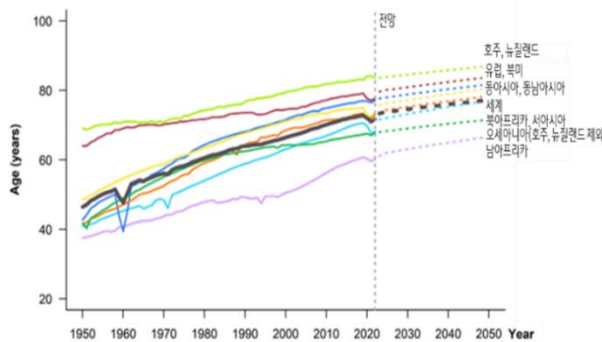
- [장수혁명의 대두] 인간 평균수명의 획기적 연장으로 개인과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직면하게 될 리스크보다 기회 요인에 초점을 맞춘 ‘장수혁명’이 주목받고 있음
  - 전 세계 기대수명은 1950년 45.5세에서 2022년 73.0세로 연장되었으며,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전망까지 확산되고 있음
  -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3대 패러다임 변화는 AI혁명, 장수혁명, 기후위기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장수혁명은 개인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
  - 장수혁명은 협의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획기적으로 연장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나타나는 개인과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포괄
  
- [장수혁명으로 인한 사회변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거시적 측면의 경제성장 둔화와 미시적 측면의 노후 불안에 직면하게 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
  - 한국 인구구조는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40년에는 전체 인구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
  - 고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성장률 및 총소비가 제약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전망되지만, 높은 교육 수준과 자산을 보유한 고령층의 증가가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할 가능성도 공존
  - 개인은 은퇴 이후에도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만큼 더 살아갈 수 있으므로 ‘건강한 노화’를 준비해야 하며, 더 많은 자산 축적과 노동시장 참여 등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장수혁명을 위한 대응과제] 고령층 증가가 ‘제2의 인구배당효과’로 연결되기 위해 △고령층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 △경제적 불평등 해소 △시스템 개편 △장수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할 필요
  - 고령층이 사회적 부담 요인이 아니라 능동적 경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담론 형성이 필요
  -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가장 높아 건강과 재정 측면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연금 등 소득 개선이 요구됨
  - 의료, 노동, 연금, 교육 등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에 대한 건실한 논의와 실질적 시행이 필요
  - 고령화사회 진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장수 리스크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장수경제 등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할 시점
  - 기업은 고령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야 하며, 특히 금융회사는 자산 증식과 자산관리에 적합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기대수명의 획기적 연장, ‘장수혁명’의 대두

- 영양 상태 개선, 의료 서비스 향상, 사회복지제도 증가 등으로 사망률이 급감함에 따라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있으며, 120세 시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
  - 전 세계 기대수명은 1950년 45.5세에서 2022년 73.0세로 연장되었으며 2050년이면 77.2세에 이를 전망<sup>1</sup>
    - 유럽의 기대수명은 10년마다 약 2.5년씩 연장되어 왔으며<sup>2</sup>, 이는 현재 40세의 경우 살아가는 동안 약 10년의 수명을 추가(bonus)로 얻게 되었음을 의미
    - 2022년 인구 50만 명 이상 국가 중 호주·홍콩·일본은 기대수명이 85세를 넘어섰으며, 한국의 경우 남성은 79.9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8.0년보다 1.9년, 여성은 85.6세로 OECD 평균인 83.2년보다 2.4년 높음
  - 역사적으로 “내가 과연 몇 살까지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전망이 확산
    -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연구 자료들을 인용하여 “이제 100세까지 사는 것이 표준이 될 수 있으며, 120세까지 사는 것도 합리적인 열망”이라고 밝힘<sup>3</sup>
    - 세계 100세 이상 인구(centenarian)는 2022년 약 57만 명에서 2050년 약 37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sup>4</sup>, 한국의 경우 2022년 출생아가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성 0.7%, 여성 3.1%를 기록
  - 60세에 은퇴를 하더라도 살아온 시간만큼 더 살아갈 수 있다는 현실은 누군가에게는 축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인 만큼,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

[그림 1] 글로벌 평균 기대수명 전망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그림 2] OECD 주요 회원국의 기대수명 비교



자료: 통계청 2022년 생명표(2023.12)

<sup>1</sup> UN, 2023,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sup>2</sup> Population Europe

<sup>3</sup> Economist, Sep. 28, 2023, “Living to 120 is becoming an imaginable prospect”

<sup>4</sup> Guardian, Apr. 4, 2024, “A ‘longevity revolution’ is coming”



- 장수(長壽, longevity)인구의 증가는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혁명’으로 평가 가능
  -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3대 패러다임 변화는 기술, 인간, 환경이며 각각의 핵심은 **AI혁명, 장수혁명, 기후위기**라고 할 수 있음<sup>5</sup>
    - 특히 장수혁명은 개인의 삶과 직결된 큰 변화이며, 행복을 위해서는 더 길어진 인생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
  - [장수혁명(longevity revolution)] 협의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획기적으로 연장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나타나는 개인과 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포괄<sup>6</sup>
    - 장수혁명은 의료 서비스, 노동시장, 교육 체계, 복지제도,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제도를 수정하는 수준이 아닌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
  - [장수 리스크(longevity risk)] 길어진 수명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의미하며, 주로 사회적 부담, 의료 부족, 사회 갈등 등 부정적 영향에 주목
    - 삶이 길어진다는 점은 일면 축복일 수 있으나, 건강과 재정 측면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적인 불행이자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음
  - [장수경제(longevity economy)] 고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교육 등 여러 산업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사업·투자 등 경제적 기회를 의미
    - 미국은퇴자협회(AARP)<sup>7</sup>는 2020년 50세 이상 인구가 전 세계 GDP에 45조 달러(전체 GDP의 34%)를 기여했으며 2050년에는 이 수치가 118조 달러(39%)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sup>8</sup>
  - [장수재정(financial longevity)] 정부, 규제 기관, 기업 등이 고령화사회 진전에 따른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혁신을 통해 고령층의 재정적 복지 증진에 기여

[표 1] 장수 관련 용어 개념 비교

구분	개념	비고
장수혁명	인간의 평균수명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현상 및 이로 인한 개인과 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	장수 관련 개념을 포괄하며 긍정적 요인에 주목
장수 리스크	장수혁명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	부정적 영향
장수경제	장수혁명으로 인해 예상되는 사업·투자 및 기타 경제적 기회	긍정적 영향
장수재정	장수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측면	재정 정책에 주목

자료: KB경영연구소

<sup>5</sup> 김현곤, 2022, “국민 개개인 삶을 위한 21세기형 국가미래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sup>6</sup> 통상 의학적 측면에서 기대수명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사전적 정의는 명확하지 않음

<sup>7</sup>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50세 이상 회원 약 4천만 명을 보유한 미국 최대의 비영리 단체

<sup>8</sup> AARP, 2022, “The Longevity Economy® Outlook”



- 《파이낸셜타임스》 수석 경제평론가인 마틴 울프(Martin Wolf)는 앤드류 스콧(Andrew Scott) 런던비즈니스스쿨 교수의 저서 『장수의 필수 요소(The Longevity Imperative)』를 인용하며 “**장수가 가져올 기회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힘<sup>9</sup>
  - 영국의 최빈 사망 연령은 1965년 생후 1세 전후에서 현재 87세로 크게 상향되었으며, 현재 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장수할 것으로 예상
  - 스콧은 기대수명 연장은 위대한 성과이지만 논의가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비용에 매몰되어 있다고 평가하며, 건강한 노년이 가져다주는 기회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장수혁명 이후 수명이 연장된 인간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표 2) 불멸이라는 가정을 제외 시 가장 비슷한 형태는 스트룰드브루그<sup>10</sup>의 삶일 것으로 예상
  - ‘**얼마나 건강하게 늙어가느냐(health ageing)**’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의학적으로는 치료보다 예방에 주력함과 동시에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함

[표 2] 노화에 대한 4가지 가정

구분	출처	특징	시사점
스트룰드브루그 (Struldbuggs)	조너선 스위프트 『걸리버 여행기』	늙은 채 영원히 사는 종족	불멸은 비현실적이며 바람직하지도 않음. 다만, 우리와 가장 비슷한 형태일 것으로 예상되며 치료·관리보다 예방에 주력해야 함
도리언 그레이 (Dorian Gray)	오스카 와일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청년으로 살다가 갑작스러운 노화와 죽음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
피터팬	『피터팬』	영원한 젊음	불멸은 비현실적이며 바람직하지도 않음
올버린	마블 코믹스	신체 재생 능력	불멸은 비현실적이며 바람직하지도 않음

자료: 《파이낸셜타임스》(2024.5); 연구자 재구성

- 장수혁명은 단순히 수명이 연장되었다는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넘어 개인의 라이프사이클이 바뀌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유지해 온 틀을 깨야 한다는 점에서 혁명적인 변화로 간주될 수 있음
  - 개인은 은퇴 이후에도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만큼 더 살아가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사회복지, 고용 등 지금껏 구축되어 온 사회 안전망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고령화 진전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어 왔으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
  - 장수혁명으로 인한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야기될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sup>9</sup> Financial Times, May 12, 2024, “Increased longevity will bring profound social 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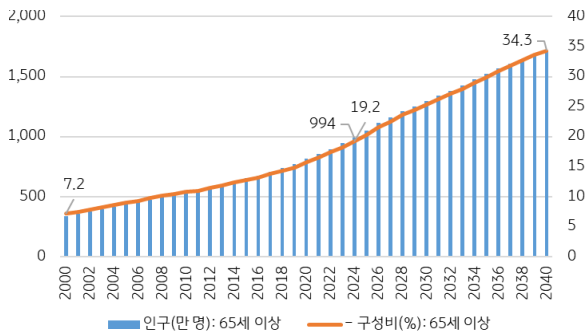
<sup>10</sup> 90세가 되면 이와 머리카락이 빠지며, 음식의 맛을 구별할 수 없고 기억도 점점 잃게 됨



■ 장수혁명으로 인한 사회변화

- [인구구조] 한국의 인구구조는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2018년 고령사회<sup>11</sup>에 진입한 이후 7년 만인 2025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전망
  -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1974년 5.5%에서 2024년 10.3%로 약 2배 증가했으며, 2074년에는 전체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을 차지할 것(20.7%)으로 전망<sup>12</sup>
  - 한국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5월 현재 994만 명(19.2%)이며, 2025년 20.3%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40년에 이르러서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34.3%)을 차지할 전망
    -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여타 국가와 비교해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여러 문제에 대한 우려가 확대
  - 고령 인구가 2021년 유소년 인구를 넘어섰으며, 2060년 무렵에는 생산연령인구(만 15~64세)를 넘어설 전망
    - 고령층 증가로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고령층이 축적된 자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소비층<sup>13</sup>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도 상존

[그림 3] 한국 65세 이상 인구 및 구성비 연도별 추이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2024.5)

[그림 4] 연령별 인구구조(생산연령인구 < 고령인구)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

- [거시경제] 고령층 증가는 경제성장률 및 총소비를 제약하고 실질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대응 여부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가능성도 상존
  - 고령화는 노동가능인구 감소(직접 효과) 및 창의적인 청장년층 인구 비중 축소에 따른 생산성 둔화(간접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sup>14</sup>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은 약 0.2~0.5%p 하락

<sup>11</sup>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로 구분

<sup>12</sup> 유엔인구기금(UNFPA), <https://www.unfpa.org/ageing#readmore-exp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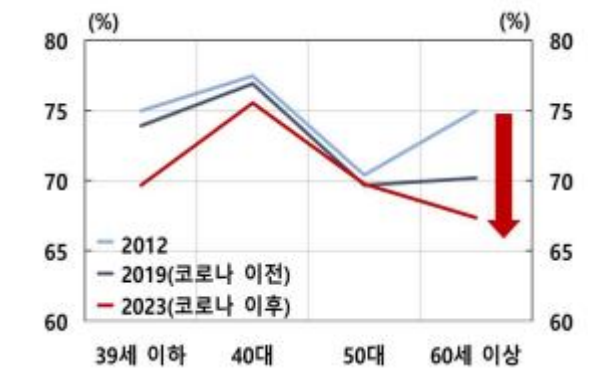
<sup>13</sup> 고령층의 소비력과 적극적 활동을 표현하는 액티브 시니어, 뉴실버, 뉴식스티 등 다양한 신조어 등장

<sup>14</sup> 강현주, 2022, “인구구조 변화가 장기 거시경제 추세에 미치는 영향”, 《이슈 보고서》 22-26호, 자본시장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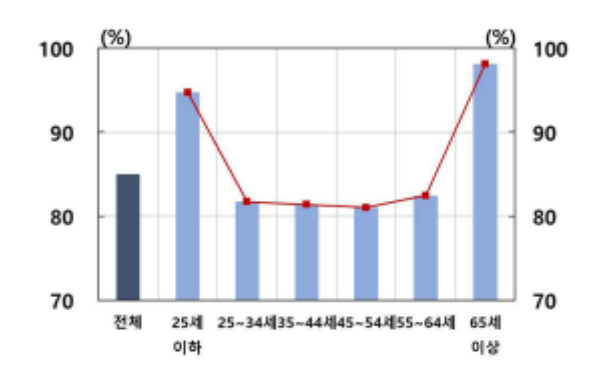
- 한국의 경우 기대수명 증가, 미래 소득 불확실성 등에 따라 고령층에서 예비적 저축이 증가하고 소비가 감소하여 평균 소비 성향이 미국 등에서 나타나는 U자 형태와는 다른 모습을 보임<sup>15</sup>
  - 2012~2023년 60세 이상의 소비 성향 하락폭은 7.9%p로 전 연령대의 하락폭인 4.0%p 대비 크게 나타남

[그림 5] 한국의 연령대별 평균 소비 성향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한국은행 재인용(2024.7)

[그림 6] 미국의 연령대별 평균 소비 성향



자료: 한국은행(2024.7), 2021년 기준

- 고령층이 증가할수록 투자가 둔화되는 반면 저축은 소폭 증가하여 실질금리는 하락할 전망
  - 선진국 대상 연구 결과, 1990년대에서 2010년대 중반까지 고령화에 따른 실질금리 하락폭을 1~2%p로 추정
- 과거 실증적 분석에 따르면 고령화는 경제성장에 제약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고령층의 소비 여력이 양호하고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내수 기반을 강화하는 긍정적 작용도 가능
  - 제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954만 명)는 높은 교육 수준과 디지털 역량, 양호한 소득과 자산을 갖추어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상당 부분 상쇄할 전망

○ [개인의 삶] 노년기의 길어진 삶으로 인해 라이프사이클에도 변화가 발생하며 건강관리, 자산 형성, 평생 교육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과거에는 개인의 삶을 ‘20세 이하(교육) - 65세 이하(일) - 65세 이후(은퇴)’로 구분 가능했으나 이제 네 단계 혹은 그 이상으로 다변화될 전망
  - 인구통계학자 장 마리 로빈(Jean-Marie Robine)은 개인의 라이프사이클에 네 번째 시기 (fourth age)를 추가해야 한다며 ‘성장기(the young) - 일하는 성년기(the adult working) - 노년기(seniors) - 노년기 이후(and the oldest old)’로 구분할 것을 제언<sup>16</sup>
-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 헬스케어 산업 성장,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고령층도 증가할 전망

<sup>15</sup> 이재호·강영관·조윤해, 2024, “제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BOK 이슈 노트》 제2024-17호, 한국은행

<sup>16</sup>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March 2016, “The longevity revolution”, SwissLife



- 한국 2022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성 79.9년, 여성 85.6년이지만 평생 유병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각각 65.1년, 66.6년임
- 인구통계학자 제임스 보펠(James Vaupel)은 오늘날의 75세는 50년 전의 65세만큼 건강하며 증가한 기대수명만큼 건강수명도 비슷하게 증가했다고 분석<sup>17</sup>
- 일각에서는 노화의 속도보다 더 빠른 과학기술의 진보 덕분에 인간 장수의 ‘퀀텀 점프’뿐 아니라 나이 들수록 더 젊어지는 ‘역노화’도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sup>18</sup>
- 일반적으로 고령층은 주식 등 위험 자산 선호가 낮다고 평가되지만, 은퇴 전까지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고 은퇴 후에도 자산관리 및 금융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유했을 가능성
- 은퇴 이후 연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계속 근로에 대한 의향이 증가함에 따라 제2, 제3의 직장을 구하기 위한 평생 교육 수요 및 직 이코노미(Gig Economy)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한국 65세 이상 고령자의 54.8%(남성 65.4%, 여성 47.3%)가 계속 근로를 희망<sup>19</sup>

## ■ 장수 리스크를 넘어 장수혁명으로

- [목표] 증가하는 고령층을 사회적 부담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인적자본으로 활용함으로써 ‘제2의 인구배당효과(second demographic dividend)’<sup>20</sup>를 획득
  - 인구배당효과란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부양률이 감소하여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를 의미
  - 장수혁명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면서 적극적인 인식 전환과 정책적 대응으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제2의 인구배당효과를 획득 가능
    - 세계적으로 노화 속도를 늦추는 의학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1년 늘어나면 38조 달러, 10년 늘어나면 367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다고 평가<sup>21</sup>되며, 다양한 간접적 효과도 기대 가능
- [인식 전환] 장수혁명을 기회 요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함에 있어 고령층 증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과 포용적 사회 조성을 위한 담론이 출발점
  - 장수혁명 이후의 고령층은 나약한 노인의 모습으로 오래 사는 것(exist long)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력 있게 오래 살게 될 것(live long)

<sup>17</sup>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March 2016, op. cit.

<sup>18</sup> 세르게이 영, 2023, 『역노화』(이진구 역), 더퀘스트

<sup>19</sup> 강민정, 2023, “고령 인구의 경제 활동과 노후 준비”, 《고용동향브리프》 2023년 9호, 한국고용정보원

<sup>20</sup> 유엔인구기금(UNFPA), <https://www.unfpa.org/ageing#readmore-expand>

<sup>21</sup> Andrew Scott, Martin Ellison, and David Sinclair, 2021, “The economic value of targeting aging”, *Nature Aging*, Volum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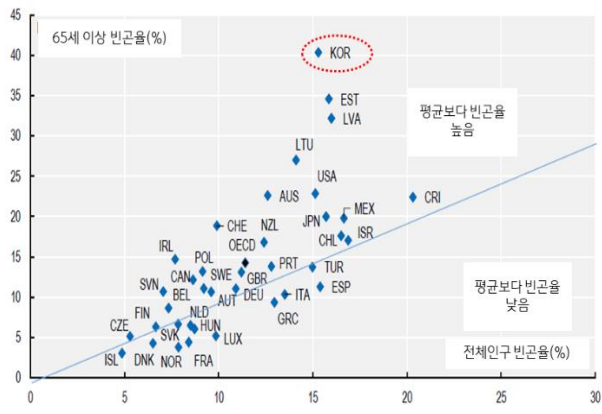


- 고령층에 대한 인식을 건강 측면에서는 나약하고 의료 시스템에 의존해야 하는 객체에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갖춘 능동적 주체로, 경제 측면에서는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에서 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
-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건강한 고령층에게 연령차별(ageism)을 가할 경우 사회적 화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야기하게 됨
  - 미국은 연령차별이 없었다면 2018년 기준 GDP가 8,500억 달러 상승했을 것이며, 연령차별을 철폐할 경우 2050년에는 3조 9천억 달러의 GDP 상승 효과가 예상됨<sup>22</sup>

○ [경제적 불평등 해소] 65세 이상 빈곤율은 경제적 자립과 건강 불평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고령층의 빈곤율 해결을 우선 과제로 선정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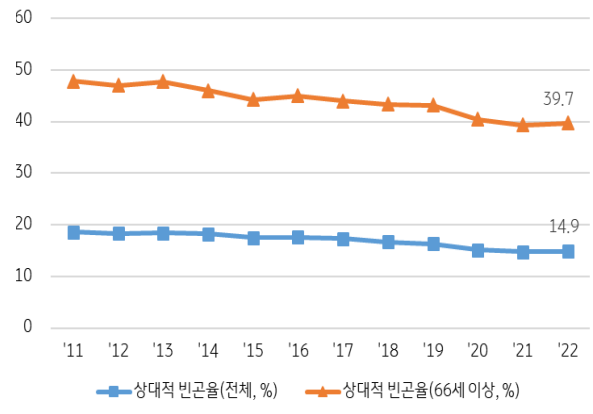
- OECD<sup>23</sup>가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sup>24</sup>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한국은 줄곧 가장 높은 빈곤율을 기록
  - 한국의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은 물론 미국(22.8%), 일본(20.0%)을 크게 상회
  - 2023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39.7%)이 전체 국민의 상대적 빈곤율(14.9%)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OECD 국가별 65세 이상 빈곤율



자료: OECD(2023.12)

[그림 8] 상대적 빈곤율 추이(처분가능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23.12)

- 누구나 장수혁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재정과 의료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 불평등 해결이 필수적이며, 특히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한국의 경우 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중요
  - 금융교육 증진, 자산관리 강화, 양질의 일자리 확보 등을 통해 자산 축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평등한 분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급

<sup>22</sup>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0, "The Economic Impact of Age Discrimination", AARP

<sup>23</sup> OECD, Dec. 2023, "Pensions at a Glance 2023"

<sup>24</sup>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값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가난한 국민이 많음을 의미



○ [시스템 개편] 다가오는 장수혁명 시대에 대비해 의료, 노동, 연금, 교육 등의 분야에서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에 대한 건설한 논의와 실질적 시행이 필요

- (의료) 장수혁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이를 사회 전체가 공유하기 위해 ‘의료 불평등’ 해소가 매우 중요하며 예방 차원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부담을 경감할 필요
  - 스코트는 미국과 중국의 GDP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기대수명이 큰 차이가 없는 이유는 의료 불평등 때문이라고 지적
  - 미국 소득 상위 1%와 하위 1% 간 기대수명 격차는 남성 15년, 여성 10년이며, 영국의 경우 부유한 지역에 사는 고령층이 빈곤한 지역에 사는 고령층보다 남성 10.7년, 여성 8.4년 장수<sup>25</sup>

• (노동) 법정 정년 연장, 맞춤형 정책 지원 등을 통한 고령층 노동력 활용 제고

- 한국 법정 정년은 60세로 주요국에 비해 빠른 편이며, 정년이 연장되면 개인은 노동 기회가 확대되고, 정부는 사회보장 및 의료 부문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 고령화를 선제적으로 경험한 영국은 ‘뉴딜 50 플러스(New Deal 50 Plus, 2000)’, 독일은 ‘50 플러스 관점(Perspective 50 Plus, 2005)’을 통해 세제 혜택, 교육 보조금 지원, 인식 전환 캠페인 등 고령자 친화적 정책을 시행

[표 3] 주요국 정년 제도

국가	현행 정년
중국	남성 60세, 여성 50~55세
일본	65세(70세로 연장 권고)
독일	65세(2029년까지 67세로 연장)
스페인	65세(2027년까지 67세로 연장)
미국	정년 폐지(1986년)
영국	정년 폐지(2011년)

자료: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2022.4)

- (연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등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향후 퇴직연금·개인연금 활성화 등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 보완이 필요
- (교육) 교육과 직업 훈련은 평생 이루어져야 하며 고령층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

○ [장수경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고령층 증가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장수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수행해야 할 6가지 원칙을 제시

-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 출산율은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낮으므로 이전 세대보다 더 오래 살고 있는 고령층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지역, 부(富)의 정도, 건강 상태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여 개인적으로도 행복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장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정적 회복력 보장 △공정한 금융 교육 △건강한 노화 지원 △평생 직업 교육 △고령층의 사회적 연결 확대 △장수 불평등 해결 등 6가지 원칙을 제안

<sup>25</sup> Financial Times, World Economic Forum



[표 4] 장수경제를 위한 세계경제포럼의 6가지 원칙

구분	핵심	주요 내용
원칙1	개인의 불안정한 재정 에 대한 회복력 보장	전 세계적으로 약 40%가 경력 단절, 질병, 예상치 못한 퇴직 등 계획되지 않은 경력 중단으로 인해 재정적 불안정에 직면 → 개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려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중요 <i>예) 네덜란드는 2028년부터 나이 들수록 퇴직연금 기여금을 낮추도록 변경</i>
원칙2	공정한 금융 교육에 대 한 보편적 접근 제공	전 세계 인구의 33%만이 금융 지식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기대수명의 불평등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부의 불평등을 야기 → 공정한 금융 교육은 개인이 정보에 입각한 금융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 <i>예) 덴마크에서 금융 교육은 13~15세 필수 교육 과정이며, 매년 금융 주간 시행</i>
원칙3	장수경제의 기반으로 건강한 노화를 최우선	인간은 인생의 약 5분의 1 기간 동안 질병을 안고 살 것으로 예상되며, 개발도상 국 성인의 약 80%가 의료비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 →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은 개인과 사회 모두의 웰빙을 촉진 <i>예) 글로벌 보험시장에서 건강을 위한 행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시행</i>
원칙4	직업 개발 및 평생 기 술 교육 제공	55세 이상 인구 중 최대 25%가 노년기에 일하기를 원하지만 기회 부족 → 원하는 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리고 역량을 개발할 필요 <i>예) 싱가포르의 연령 포용적 문화 구축을 위해 재취업 기회 및 보조금 제공</i>
원칙5	사회적 연결과 목적을 위한 시스템 및 환경 설계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건강이 좋지 않고 조기 사망할 위험이 더 높음 → 사회적 연결을 위한 시스템과 환경을 설계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완화 <i>예)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85% 이상이 고령자를 위한 지역 밀착형 오프라인 만남 지원</i>
원칙6	성별, 인종, 계층 등에 의한 장수 불평등 해소	재정적 안정과 장수에 따른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음 → 급여 및 연금 형평성, 간병인 지원 등이 중요 <i>예) 영국 코벤트리시는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계획 도시<sup>26</sup>를 추진</i>

자료: 세계경제포럼(2024.1); 연구자 재구성

○ [기업 대응 과제] 고령층을 인적자본으로 활용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장수혁명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소비자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

- 조직 내부적으로 고령자 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 고령층 고용 제고, 연령차별 철폐, 건강 경영, 평생 교육 지원 등을 추진
- 건강한 고령층 증가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고 고객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헬스케어, 여가·문화, 주거·생활환경 개선, 에이지 테크(age-tech) 등의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발굴
- 금융회사는 장수혁명 시대 변화할 생애주기에 초점을 맞춘 자산 증식 상품·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되, 상품·서비스 설계 시 인구통계학적 요인 변화에 따른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나 투자 기간 선호도 등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

<연구위원 이창우(changwoo2.lee@kbfgr.com)>

<sup>26</sup> 마이클 마모트 경(Sir Michael Marmot)이 제안한 마모트 도시는 취약하고 소외된 인구에 초점을 맞춰 더욱 건강하고 공평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도시이며, 코벤트리시는 마모트 네트워크에 합류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강현주, 2022, “인구구조 변화가 장기 거시경제 추세에 미치는 영향”, 《이슈 보고서》 22-26호, 자본시장연구원.

강민정, 2023, “고령 인구의 경제 활동과 노후 준비”, 《고용동향브리프》 2023년 9호, 한국고용정보원.

이재호 · 강영관 · 조윤해, 2024, “제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BOK 이슈노트》 제2024-17호, 한국은행.

통계청, 2023, 2022년 생명표.

통계청, 2023, 가계금융복지조사.

### <해외 문헌>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0, “The Economic Impact of Age Discrimination”, AARP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6, “The longevity revolution”, SwissLife

OECD, 2024, OECD Health Statistics 2023.

UN, 2023,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World Economic Forum, 2024, Longevity Economy Principles.

### <웹사이트>

Economist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3/09/28/living-to-120-is-becoming-an-imaginable-prospect>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a8f33209-3507-4364-98be-61b3bb464fbb>

IE University <https://www.ie.edu/insights/articles/the-longevity-revolution-is-coming/>

Nature <https://www.nature.com/articles/s43587-021-00080-0>

UNFPA <https://www.unfpa.org/ageing#readmore-expand>